

삶의 질이 도시의 질이다

- 도시계획은 도시 안에 존재하는 무수한 삶의 양식들을 규정하며 도시계획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도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데 있음
 - 이러한 점에서 도시민의 삶의 질은 곧 도시의 질이며 ‘도시 읽기’는 도시민의 ‘삶 읽기’가 되어야 함
 - 또한 도시정책도 이제 삶의 양적추구에서 질적추구로, 문제해결형에서 구조혁신형으로, 생산기반중시에서 생활환경과 문화중시로 전환해야 함
- 삶의 질은 절대적 개념이 아니며 시간적, 공간적 상대성을 가진 개념임
 - 그러므로 공간과 시기에 따라 삶의 질을 가늠하는 척도가 달라지며,
 - 총량적인 경제성장만으로 다양한 계층의 차별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는 한계를 가짐
- 한국 도시의 삶의 질은 물리적인 부분에 비해 비물리적 부문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이며, 국제적으로 비교해 볼 때 선진국과 주변국 주요도시의 삶의 질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
- 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계층별로 다양해지는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지역사회적, 미시적 조절장치가 필요
 - 혁신, 균형, 경쟁력 등 거창한 국가적 과제를 도시민의 일상적 삶과 실질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미시적 정책개발이 필요
 - 삶의 질을 중심가치에 두는 새로운 공간계획 방법론과 행정평가체제에 대한 연구 개발 필요

1. 경제성장과 삶의 질 사이의 불균형

- 한국은 지난 30여년간 급속한 경제성장을 통하여 GDP 규모 세계 10위, 수출규모 세계 9위, 주력산업의 경쟁력은 세계 5위권에 달하는 산업·통상강국으로 성장함
- 그러나 지난 3월 15일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삶의 질 비교자료에 의하면, 한국의 삶의 질은 보건, 복지, 교육, 문화, 환경 등 거의 모든 측면에서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임
 - 주요 수치를 살펴보면, 1인당 연간 근로시간 1위, 자동차 100만대당 사고율 1위, 사교육비 지출 1위, 평균수명 24위, 1인당 보건비 지출 26위를 기록
- 이는 그동안 한국의 경제성장이 경제발전의 질적 측면을 도외시한 채 양적 성장만을 추구해 온 결과로 국가발전 목표에 대한 전면적인 반성이 필요함을 의미함
 - 경제발전의 궁극적인 목적이 양적 지표의 성장이 아닌 국민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임을 재확인하고 한국의 발전모델을 이제 ‘양’ 중심에서 ‘질’ 중심으로 전환시켜야 함
 - 도시정책 역시 지금까지 무한대의 수요를 상정한 확대, 확장, 확충 일변도에서 질적 추구로, 문제해결형에서 구조혁신형으로, 생산기반중시에서 생활환경과 문화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함

2. 삶의 질 개념의 재정립

- 삶의 질 개념은 공간에 따라서, 시대에 따라서, 경제발전의 수준에 따라서 변화하는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개념임
 - 과거의 삶의 질은 생존에 필요한 조건들이 얼마나 잘 충족되고 있는가에 그 기준이 있었다면, 오늘날의 삶의 질은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, 문화생활을 얼마나 향유할 수 있는가, 얼마나 쾌적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가 등 다양한 기준으로 제시될 수 있음
- 삶의 질은 단순히 경제발전의 부산물로 볼 수 없음
 - 경제발전이 평균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조건임은 분명하지만, 다양한 계

층(지역별, 소득별, 연령별)의 삶의 질을 고양시키기 위해서는 총량적인 경제성장으로서는 불충분함

- 특히 대형사고의 위험, 교통사고, 산업재해, 환경오염 등 경제성장에 부수하는 사회적 위험요소의 증가는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

○ 삶의 질에 대한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평가 사이에 괴리가 존재

- 기존의 연구들은 삶의 질에 대한 양적인 지표가 곧 주관적인 만족도를 의미하지 않음을 보여주며, 따라서 객관적인 사회지표와 더불어 심리적인 만족감, 행복감, 안정감을 측정하고 이를 고양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

3. 한국 도시의 삶의 질 현황

○ 한국 도시의 삶의 질(1998년 기준)은 경제성·편리성과 같은 물리적인 삶의 질이 교육·문화 및 건강·안전성과 같은 비물리적 삶의 질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개선됨
- 물리적 삶의 질은 많이 개선된 반면 도시간 격차는 오히려 증가하였으며, 비물리적 삶의 질은 상대적으로 덜 개선된 반면 도시간 격차는 감소함

○ 인구규모별로 살펴보면, 50만~100만 규모 도시의 삶의 질이 가장 열악하고 개선속도도 느리며, 상대적으로 10만 미만의 도시에서 삶의 질이 가장 많이 향상됨
- 물리적 삶의 질의 경우, 서울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50만 미만 도시가 50만 이상 도시보다 높은 반면
- 비물리적 삶의 질의 경우 교육·문화적 삶의 질은 50만 미만도시가, 건강·안전한 삶의 질은 50만 이상 도시가 높게 나타남

○ OECD자료(2005)에 의하면 한국 도시의 삶의 질 수준은 한국의 경제발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주변국의 주요도시에 비해서도 뒤처지고 있음
- 한국의 삶의 질은 대체로 1인당 GDP 24위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, 1인당 근로시간, 100만대당 자동차 사고, 사교육비 지출 등은 모두 1위를 기록하여 건강, 안전 등의 분야에서 취약함을 보임

- 전 세계 215개 도시를 대상으로 한 삶의 질 평가에서 서울은 90위로 도쿄(33위), 싱가포르(33위), 홍콩(70위), 타이페이(80위) 등 경쟁국의 도시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됨(머서휴먼리소스컨설팅, 2004)

4.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

- 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복지체제의 거시조절장치가 할 수 없는 더욱 면밀하고 근접한 중재를 하는 지역사회적 미시조절 장치와 조직이 필요
 -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, 주민, 시민단체가 공동협력하는 참여와 협력의 모델 필요
 - 삶의 질을 기준으로 중앙과 지방정부의 정책과 행정서비스에 대한 평가체제 구축
- 삶의 질을 중심가치에 두는 새로운 공간계획 방법론의 연구 개발 필요
 - 삶의 질이란 流量(flow)으로서의 객관적인 상황조건과 이를 인지하는 貯量(stock)으로서의 주관적인 척도에 의해 결정되므로,
 - 이들 두 가지 차원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계획과정모형을 개발하고 계획의 새로운 역할에 대처할 수 있도록 계획영역의 확대를 준비
 - 도시품평회(city fair & expo) 개최 등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‘살고 싶은 도시’란 무엇인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
- 삶의 질은 사회구조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건강과 독서, 가족 그리고 영성(靈性)과 같은 사적이고 일상적인 영역에서도 중요
 - 따라서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사회발전과정 전반에 대한 질적 전환 추구를 의미하며, 지금 한국의 도시는 삶의 질에 대한 폭증하는 사회적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 전선에 서 있음
 - 이것이 바로 삶의 질이 21세기 공간계획의 키워드로 자리 잡아야 하는 이유가 될 것임

국토연구원 김현식 선임연구위원 (hskim@krihs.re.kr, 031-380-0300)

국토연구원 박세훈 책임연구위원 (shpark@krihs.re.kr, 031-380-0158)